

폐지 재활용업체 공단 우선입주

환경처, 폐기물 재활용 늘리게

앞으로 폐지를 비롯한 폐자원을 재활용하는 업체에 공단 우선 입주권과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환경처는 최근 폐기물의 재활용을 늘리고 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자원재활용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재무부, 상공자원부, 건설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행키로 했다.

현재 검토중인 안은 정부가 개발하거나 이미 개발한 공단 및 부지확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각급 초·중·고교가 시험용지 등을 사들일 때 재활용품의 사용을 권장키로 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 폐지 및 합성고무 등 8종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 재활용가치가 높은 품목을 추후 선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기업이 재생·재활용·감량화를 고려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품을 만들 때 폐자원의 수입 의무율을 설정하고 제품의 특성에 따른 사업자의 공동회수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포장물 폐기정책 실행에 문제

환경처 단속지시 시도 실적 없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전체 폐기물의 14%를 차지하는 상품포장 폐기물을 줄이려는 정책이 환경처와 시도간에 엇갈려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최근 환경처에 따르면 환경처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신정 및 구정을 전후해 주요 백화점 유통센터 등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행위를 단속하도록 지시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한 시도는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들어났다.

지난 1월 신정연휴가 끝난후 15개 시도 가운데 부산, 대전, 경기, 강원, 제주, 충북, 충남, 경남 등 8개 시도만이 지도단속 실적을 공문으로 보고했고 나머지는 보고서조차도 보내지 않았다.

보고서를 제출한 시도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나 과대포장자제 공문을 시달리는데 그쳤을뿐 단속반 운영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물류관련 KS제도 대폭 정비나서

공진청, 산업포장 국제규격으로

포장·수송 등 물류관련 국가규격이 대폭 정비된다.

공진청(공정거래위원회)은 제품의 포장·수송 등 물류비용이 제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큰 요인이라 보고 이와 관련된 KS규격을 올해중 개정하거나 새로 제정키로 했다.

공진청은 이에따라 현재 국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227종의 물류관련 KS규격을 전면 재정비, 우선 올해중 국제규격 등과 부합시켜야 할 15종의 국가규격을 개정하고 40종의 물류관련 규격을 신규 제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공진청의 이같은 계획에 따라 상품의 운송기계화 등에 활용되는 유니트로드의 치수 및 시스템통척, 트럭적재함 치수, 그리고 지게차, 핸드리프트 등 물류와 관련된 규칙이 새로 제정된다.

또 산업포장의 적정기준, 통조림용 공관 등 기존의 규격은 국제규격에 맞춰 개정된다.

공진청은 이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우리나라의 국가규격은 제품포장에서부터 수송, 보관, 하역, 정보관리 등 물류와 관련된 전분야에서 일관된 체계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무역관 중소기업 지사화

무공, 해외시장 개척에 일조

대한무역진흥공사는 자력으로 해외시장 개척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하여 해외무역관을 지사로 활용토록 하는 'KOTRA 해외무역관의 중소기업 지사화사업'을 실시한다.

KOTRA가 지원하는 내용은 ▲바이어 및 인콰이어리 최우선 소개 ▲해외 세일즈 출장시 상담주선 및 지원 ▲시장개척단 파견시 우선선정 ▲현지 시장정보 및 자료제공 ▲바이어와의 거래교신 지원 등이다.

해외무역관 지사화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선정기준은 1개업체당 최고 5개 무역관까지 지사로 연결해 주며 신청 경쟁시 품목의 시장성, 업체 희망순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동일분야 동일무역관에 다수업체 신청시 내부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

운영기간은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중소기업으로 연간 1,000만불 미만의 수출업체가 2개품목 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문의전화:551-4317).